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연대관계 모색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시대 변화는 노동운동은 물론 시민운동에도 새로운 활동과 내용을 강요하고 있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관계를 짚어본다.

박원석

참여연대 연대사업부장

90년대 사회운동의 전개

90년대 사회운동의 전개는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변화는 뚜렷하다. 이를테면 환경, 인권, 삶의 질 향상, 권력감시, 부패추방 등을 목표와 이슈로 하는 이른바 "시민운동"의 등장과 발전, 민주노총으로 집약되는 노동조합운동의 성장,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고 뿌리내리는 지역운동, 신구 사회운동간의 다양한 연대관계의 형성 및 그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간에 어떠한 연대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노동운동과 같은 계급운동과 '시민운동'의 형태를 띤 다계급적 운동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과 실용주의적 관점의 사회운동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대중운동과 정치운동과의 관계 혹은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형성과정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설득력 있는 답을 구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도 이슈 또는 특정 부문의 사회운동과 달리, 상당한 정책전문성과 여론 동원력 그리고 권력을 종합적으로 상대하는 역량을 갖춘 '시민운동'의 등장

은 사회운동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계급운동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고찰을 하게 하는 현상이다. 여기에 최근 새 정부 출범과 IMF 관리체제의 등장이라는 이중의 상황변화를 맞이하여,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연대관계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성장과 위기

90년대 시민운동의 등장과 발전은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추진된 이른바 '위로부터의 개혁'과 이에 반비례하여 나타난 '구사회운동의 축소'라는 두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 졌다. 국가권력의 물리적 폭압성 완화와 개량적 통치방식의 등장에 따라 '반독재 민주화'에 집중되어 있던 저항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폭압체제 아래서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요구 분출에 기반하여 새로운 문제군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정책수단을 통한 제도적 해결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평화, 인권, 공해추방, 경제정의 등의 이슈를 비폭력, 비정파적 수단에 의거해 추진하는 '시민운동'이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구분되는 흐름으로 형성되었다.

시민운동은 지난 6-7년 사이 급격한 성장을 해 영향력 있는 사회집단으로 자리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전의一面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바 있는 지나친 언론 의존도, 전문가 중심, 취약한 대중 참여, 배타성 등의 비판은 다소 평면적일지도라도 시민운동이 넘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사회발전의 장기 전망과 전략을 세우고 주체를 마련하는 사회운동의 보다 거시적인 판단과 대응도 시민운동의 끝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같은 인식에 기반하여 현재 시민운동이 보이고 있는 '노선없는 내용'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특히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요하는 IMF체제의 대두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병행"을 내건 신 정부의 수립 이후의 상황은 '신자유주의 시장노선'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풍미했던 탈이념적이고 중립적이었던 이른바 'NGO 운동론'의 의의는 퇴색될 것이며, 사회운동 각각의 대중적 기초와 이념적 차이가 현저해 질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념적 정체'를 유보해 왔던 시민운동으로서는 부담인 동시에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IMF 체제의 등장과 신정부 출범 이후 노동운동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실업의 양상은 막연한 우려보다 훨씬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150만명 이상의 실업이 발생했으며 하루에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만 200만 이상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전 경제활동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게다가 실직자들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 이상의 인구가 생계의 위협에 처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회문제-자살, 이혼, 범죄, 가정 파괴 등이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근본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노동대중과 서민의 고통이 원초적인 분노와 저항으로 표출될 상황이 멀지 않았다. 한편 계획된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개편은 노동운동의 입지 축소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정리해고, 파견근로의 시행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운동의 조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경제난 국복-고통분담'을 명분으로 한 부당한 압력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민의 고통이 심화되는 동시에 저항의 입지는 축소되는 이중의 난관에서 노동운동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가에 따라 향후 위상과 입지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진보적 사회운동간의 연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응 원칙과 관점이 분명해 질 필요가 있다.

첫째로 조직노동자 위주의 대응을 벗어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실업의 문제는 조직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업급여 등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 다수 저소득 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장의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사회적인 실업의 문제에 대처를 수립하고 대응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노동운동 계급성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로, '경제회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개혁'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신정부가 추진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정책에 대한 판단과 개입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정책참여'에 대한 입장이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표방한 '사회개혁투쟁'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현 노사정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기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개입의 수준을 경제정책 전반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 거부는 명분은 세울 수 있을지언정 현실 대안은 될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다.

셋째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진보적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필자가 소속된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민주노총 대응이 시민사회운동과 완전히 단절된 채 진행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이 합의 과정의 주요 내외적 고비에서 시민사회가 발언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면 안팎의 역풍을 차단하고 좀 더 좋은 결과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IMF 체제하의 실업파 생존의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세계화가 빚어내는 '시장의 횡포'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진보 사회운동의 연대는 필연이고 일차적이다. 짧은 기간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노동운동이 손을 내밀 필요는 있다.

넷째로, 앞선 세 가지 관점과 원칙을 규정하는 전제로서 노동대중과 서민의 고통에 기초한 여고 없는 저항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전지구적인 자본축적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그 대안을 쉽사리 논의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밀려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차적인 대안은 생존의 압박과 고통에 항의하는 원초적 저항이다. 단 이 저항을 계획된 저항, 준비된 저항으로 만들어 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원칙과 방향

전략적인 것과 전술적인 것

신정부하에서의 개입전략과 서민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저항전략은 "원칙있는 개입과 계획된 저항"의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 긴장관계에 있는 '개입'과 '저항' 전략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회운동간에 효과적인 연대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회운동간에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연대관계를 맺으려면 공동의 운동 목표가 설정되고 대중적으로 공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협의, 조정의 수준으로 머무르기 쉽다. 협의와 조정 역시 공동의 운동 목표가 분명치 않을 경우 가능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이를 전략적인 연대와 전술적인 연대로 구분지워 살펴보면 공동의 상

황판단, 공통의 운동과제, 실천적인 신뢰관계가 전략적 연대를 규정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와 IMF 체제라는 이중의 새로움에 처해 있는 우리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적인 연대’는 쉽게 형성되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대관계는 ‘사안별 연대’라고 불리는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조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구나 봇물 터진 정리해고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노동운동의 상황 때문에 ‘전략적인 연대’를 위한 합의는 빠른 시일 안에 이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연대’를 위한 정책협의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뚜렷한 형식이 없어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설정되는 공통과제와 진보 개혁적인 파트너쉽을 기초로 하는 ‘전략적 연대’는 목적의식적인 정책협의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안정시키는 준상설적인 협의구조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다. 전략적 연대를 전제로 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간의 정책협의는 현재 연대활동에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전술적 연대를 통한 경계 넘기

현재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경험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전술적 연대’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곤란하다. 비단 노동운동-시민운동 관계만이 아닌 사회운동 전반의 연대관계의 현재적 조건 또한 그러하다. 상당히 형식화되어 정책적 주도력이나 행동성을 상실해버린 다양한 사회단체 연합구조와 중심운동력간의 수평적 관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전략적 연대’는 무리한 부담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사회운동이 자유롭게 개별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연대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진보 개혁적인 사회운동의 확장과 유연성, 그리고 상황주도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연대구조 논의’가 불필요하게 연대사업을 제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테면 ‘부당노동행위 저지’를 과제로 노동운동이 광범위한 연대를 제안할 경우, 진보 개혁적인 사회운동은 기존의 연대구조를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이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개혁과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사회운동이 중심이 되고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진보 개혁적인 사회단체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진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실업대책, 재벌개혁, 반민주제도 개혁, 분야별 부패구조의 청산 등의 과제를 올해 추진할 주요한 과제로 설정할 수 있겠다.

상호주의와 호혜성

지난 노사정 합의 국면에서 친 노동적인 시민운동, 특히 필자가 소속된 참여연대로서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의 의지가 '섣부른 간섭'으로 오해되는 측면이었다. 지난 일이지만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사정 합의가 노동운동의 당사자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IMF 체제하의 실업 및 국민생존에 밀접한 사안들이 관계되어 있는 시민사회운동으로서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민주노총의 주도성과 지도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사회운동의 토론과 의견제출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은 급하면 동원되는 것에 그쳤으며, 공통된 상황 판단에 기초해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노총의 교섭력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취약한 연대 경험에서 기인하는 문제지만 정당한 주체로 상대를 인정하는 연대의 관점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다. 서로 다른 사회운동이 실질적으로 만나기 위한 필수적인 약속으로서, 단체의 일관된 개혁성, 대중적 실천의 책임성, 논의의 투명성, 평등하고 존중하는 상호관계 등이 필요하며 포괄적으로 이를 '상호주의와 호혜성의 원칙'으로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원칙은 앞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태도이다..

이중 멤버쉽(Dual Membership)의 추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본격적인 연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제중심의 연대만이 아닌 구성원간의 활발한 상호교류와 친화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적극적인 운동의 관점으로 개념화한다면 '이중 멤버쉽'의 추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사회인은 다원적이며 복합적인 경제성을 갖고 있다. 노동자인 동시에 시민이며, 지역주민이며, 가장이다. 자신의 주거집단에 기반하여 사고하고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욕구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를 사회운동간의 연대의 관점에서 포착하면 시민운동의 대중참여는 먼데서 막연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시민단체를 잘 알리고 이를 통해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일반적인 민주주의 소양의 훈련을 시민단체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서로 접근하는 부담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친화성을 높여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연대성을 강화하는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